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전성훈, 조민, 허문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 박형중, 전성훈, 조민, 허문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인 쇄 2008년 8월
발 행 2008년 8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주) 늘품플러스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 박형중,
전성훈, 조민, 허문영.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08-02)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479-463-4 93340 : 비매품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8002590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전성훈, 조민, 허문영
통일연구원



I. 서론	1
II. 시나리오 기법의 내용	5
III.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	11
1. 향후 5년 동북아 정세	12
2. 향후 5년 남북관계	17
3. 향후 5년 북한내부 정세	22
4. 향후 5년 한국의 대내정치	25

IV.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29
1. 주요 변수	30
2. 시나리오별 전개 양상	32
V. 결론과 요약	61
참고문헌	67
1, 2차 워크숍 참가자 명단	69
최근 발간자료 안내	71

I

서론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10년 만에 등장하는 보수정부이다. 여러 정책 분야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북정책도 그 분야의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한관계와 주변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면서, 이에 연계하여 남북대화, 대북지원, 경협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 구상」이라는 비전에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중시하는 대외정책 입장을 취하면서, 대북정책에서도 한·미 간에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국내외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의 국내정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현저히 강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4월 경부터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비판적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주변국도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반기고 있지만, 중국은 유보적이다. 한편 새로운 정세도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6월 비핵화 2단계와 관련한 합의에 기초하여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정상의 교차방문을 실현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지 않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앞으로 5년 동안

더욱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특정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주어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의 한 방법은 정부 대북정책 입장을 불확실성에 대비해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의 다양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상황 유도에 도움이 되는 한편 해로운 상황의 도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정책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는 만약 이미 정책입장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책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에 대해 준비를 갖춘 대북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매우 낙관적인 미래 상황이 전개하는 경우에만 그 실효성을 가진 정책에 비하여, 현저히 우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5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그를 기초로 대북정책의 장단점, 정책적 보완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활용된 기법이 시나리오 기법이며, 4월 30일과 5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시나리오 기법을 응용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이 글은 그 성과를 서술한다.

2장은 시나리오 기법에 대한 소개이다. 3장과 4장은 시나리오 기법 적용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서술한다. 첫째는 앞으로 5년 동안 대체로 변화하지 않을 배경적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 5년 동안 상황을 구성하는 여러 변동 요인 중에서도 상황의 전개에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5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I
II
III
IV
V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인을 설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¹

¹ 이 글은 일단 여기에서 중단한다. 다음 작업은 제기된 시나리오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추가 작업은 2008년도 후반기에 완료될 것이다.



II

시나리오 기법의 내용

앞에서 시사했듯이, 향후 5년 남북관계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가 시나리오 기법이다. 여기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소개하고, 이 기법이 남북관계 연구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소개한다.

시나리오란, 미래의 환경이 우리의 조직, 이슈, 국가, 또는 세계와 관련한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stories)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예측이 아니다. 예측은 뚜렷한 추세가 존재하며 불확실성이 개입할 개연성이 낮은 사항에 대해 행해질 수 있다. 시나리오란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 때문에 미래가 복잡적이고 불확정적일 때,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대한 도발적이고 그럴듯한 묘사이다.”² 시나리오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환경이 여러 복합적 요소들의 작용 때문에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그 다양한 미래를 탐험하게 해주는 방법으로써, 그에 함축되어 있는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게 해준다. 나아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 부정적, 예측불가적 다양한 미래 환경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다양한 가능한 미래들 속에서 우리가 현재 견지하는 전략, 변화이론, 또는 비전이 과연 얼마나 유효한 것인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³

그런데 좋은 시나리오란 사후적으로 볼 때 미래를 정말로 정확히 묘사했다고 판정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해당 조직의 학습, 적응,

² 마츠 린드그렌·한스 반드홀드, 『시나리오 플래닝』 (필맥, 2005), p. 50.

³ Global Business Network, *Overview of Scenario Thinking Concepts*, p. 1, <www.gbn.com/whatif>.

효율적 행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시나리오이다.⁴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정확성 보다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 잠재적인 위협과 기회를 식별해냄으로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조직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주목되어야 할 문제가 주목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⁵ 그래야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변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추진 가능한 탄력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 된다.⁶ 또한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내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조직구성원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시각들이 시나리오 작성과정을 매개로 -그렇지 않았으면 용이하지 않았을- 전략적인 대화과정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나리오는 또한 시나리오 작성과정은 공동체 내에 미래전략에 관한 전략적 대화를 촉진하고, 여러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며 그에 비추어 현재의 조직의 준비나 전략을 공동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조직이나 공동체 내에서 미래 준비와 지향에서 공동인식의 폭을 넓히고 확산시킬 수 있다.⁷ 요약하면,

“시나리오 기법은 광범한 분야와 전공을 포괄하는 협동적 방법으로서, 단순한 토론 이상의 것이다. 단 하나의 정책방안을 고집하는 대신에, 시나리오 기법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⁸는 것이다.

⁴- Kees van der Heijden, *The Sixth Sense: Accelerating Organizational Learning with Scenarios* (London: John Wiley & Sons, LTD., 2002).

⁵- 린드그렌·반드홀트, 『시나리오 플래닝』, p. 53.

⁶- Miranda Weingartner, “Dealing with uncertainty: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M. Martellini and R. Redaelli (Editors), *Cooperativ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the Aftermath of the latest Round of the 6-Party Talk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Como, Italy, 26 March 2007), p. 164.

⁷- Kees van der Heijden, *Scenarios: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London: John Wiley & Sons, 1996).

시나리오 작성⁹⁾의 첫째 단계는 해명되어야 할 주제 또는 질문을 정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한 주요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되는 워크숍 등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워크숍은 전략적 대화의 활성화와 합의 형성을 위해 상이한 견해를 가진 이해당사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둘째 단계는 관심 주제에 대한 ‘추동 요소’(driving forces)을 찾아내는 것이다. 통일의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는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추동 요소는 고정 요소와 불확실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 요소는 관심 시간대에는 대체로 변하지 않을 요소이다. 불확실 요소는 말 그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추동 요소이다. 다양한 불확실 요소 중에서 ‘핵심적 불확실성’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견된 불확실 요소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 상호인과관계의 추적 등을 분석하여, 개수를 줄인다. 그리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불확실한 요소, 다시 말해 ‘핵심적 불확실성’을 찾아낸다. 대개의 경우, 핵심적 불확실성(핵심변수)을 두 개 정도로 압축한다.

셋째 단계는 추출된 두 개의 핵심적 불확실성 요소를 사용하여, 2×2의 4가지 경우의 수에 바탕한 4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 통일의 양상을 결정짓는 핵심변수로서, 북한의 안정 불안정 여부와 동북아 국가들(한-미-중-일) 관계의 협조 또는 갈등 여부가 설정

⁸⁾ Weingartner, “Dealing with uncertainty: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p. 168.

⁹⁾ 시나리오 작성 방법과 단계에 대해서 여기서는 주로 Diana Scarce, Katherine Fulton, *What If? The Art of Scenario Thinking for Nonprofits* (Global Business Network, 2004), pp. 24-34, <<http://www.gbn.com/ArticleDisplayServlet.srv?aid=32655>> 참조. 이밖에도 마츠 린드그렌-한스 반드홀드, 『시나리오 플래닝』; 피터 슈워츠, 『미래를 읽는 기술』 (비즈니스북스, 2007); 최항섭 외,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최항섭 외,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참조.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안정 대 불안정, 협조 대 갈등을 조합하면, 4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틀을 기초로 ‘통일’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4가지 양상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를 쓴다. 각 줄거리마다 식별을 위해 눈에 띄고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이름을 붙여준다.

넷째 단계는 작성된 시나리오를 토대로 행동을 기획하고 행하는 단계이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만약 실제로 그 시나리오가 미래에 현실이 될 경우가 현재의 행위자에게 주는 함축의미를 찾아내어야 한다. 즉, 개별 시나리오는 (좋은 미래일 경우) 실지로 실현되는 것을 촉진 또는 (나쁜 미래일 경우) 방해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누구와 언제 어디서 왜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또는 조직이 견지하고 있는 현재의 전략적 입장이 지속될 경우, 미래 시나리오에 비추어 보아,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수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숙고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단계는 모니터링의 단계이다. 해당 주제 또는 질문과 관련된 여러 추동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어떠한 추세를 형성하는가를 관찰해가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어떤 특정 시나리오로 미래가 전개될 것 또는 중대한 변화나 전환의 발생을 시사해주는 몇 개의 ‘주요 지표’들(leading indicators)을 설정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I

II

III

IV

V

III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

시나리오 기법은 질문을 정하고, 그 질문과 관련된 추동 요인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번 시나리오 작업의 질문은 향후 5년 남북관계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 남북관계, 북한내부, 한국 국내 정치의 4개 분야에 걸쳐, 향후 5년 간 분야별 상황을 구성할 요인이 선별되었다. 이 중에는 향후 5년 간에 걸쳐 그 변동없이 지속될 고정 요소와 크거나 작게 상황 전개에 변화를 초래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분야별로 선별된 고정 요인과 변동 요인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향후 5년 동북아 정세

가. 향후 5년 동북아 정세 주요 방향

향후 5년 동북아 정세는 매우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매우 동태적이고 다사다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크게 보아 대세의 특징은 ‘현상 유지 우세 속 미국 리더십 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체적으로 보아 앞으로 5년 동안 세계경제 상황은 낙관적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동북아 국가들 간에 기존하는 크고 작은 의심과 갈등 관계, 그리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여러 역내 변화 추세는 큰 변동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우세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관계 및 미·중·일 관계는 안정적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전반 정세의 안정은 궁극적으로 북한 변화와 남북한관계 증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향후 5년 동북아 정세 불변 요인

먼저 앞으로 5년 간의 동북아 정세에서, 큰 변화없이 지속될 추세, 또는 예측가능한 사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었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자원경쟁의 심화
- 식량위기 및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증가
- 미국발 경제불안 가능성

〈미국〉

- 미국의 아시아 세력 지위 고수 전략 지속
- 기존의 미·일 및 한·미동맹은 미국의 역내 리더십 지지
- 미국의 동북아 역내 우월적 리더십 유지
- 미국의 2008/12년 신행정부 출범 (민주당 행정부 출현 유력)
- 미국의 내향적 정책 정향 조짐과 지역 리더십 약화 가능성
- 미국의 이라크 몰입 지속
- 중국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공조 강화
- 미국 대외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최우선 의제가 아님

〈중국〉

- 중국은 올림픽, 상해 무역박람회, 5세대 지도부 등장 준비 등에 힘입어 역내 영향력 확대 기반 공고화
- 중국의 ‘책임있는 당사자 역할’의 증대와 동아시아 공공재 제공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I

II

III

IV

V

- 중국의 대북핵 문제 해결 주도로 역내 위상 강화
- 중국의 민족주의 추세 심화와 주변국과 마찰 가능성
- 중국 위엔화의 위력 증대
- 중국내 대내 정세 불안 가능성 (민주화/인권, 티벳문제, 올림픽 개최 성공 여부)
- 중국 대만간 양안 관계 개선

〈일본〉

- (중국의 역할 부상에 따라) 일본의 역내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
- 미국, 인도, 호주 등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영향력 견제 노력 지속
- 미·일동맹 유지 속, 일본의 정치적·군사적 역할 증대 노력
- 일본의 보수주의 경향 심화 및 헌법 개정 등 보통국가화 완결 노력
- 아시아 중시 외교의 지속성
- 일본의 영토 문제 주장 (독도, 북방 4개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한 마찰 가능성

〈러시아〉

- 러시아의 유럽 중심 사고 우세, 내향적 정향 계속
- 러시아의 자원/에너지 협력을 지렛대로 한 역할 확대 추구
-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 의지
- 중국 접경지역에서 중국계 인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한국〉

-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심화
- 한·미동맹 공고화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 증대)
- 중국과 관계 강화 노력
- 한국의 비확산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 여부

〈북한〉

- 경제난 지속, 내부 정치 안정 속에 불안 가능성
- 비핵화 3단계 진행
- 대외관계 다원화 노력

〈양자 및 다자 관계〉

- 한·일 외교관계 성숙 또는 영토·역사 문제로 갈등 재개
- 한·미 안보 유대 공고화 지속 (동맹 강화, 신안보 공동 선언 등)
- 한·미·일 안보협력의 결속 강화
- 한·러 자원/에너지 협력 진전
- 한·중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격상되지만, 상호 신뢰는 약화
- 한·중·일 삼국의 군비 축적(경쟁?) 지속
- 한·중·일 사회/문화적 친밀도 확대
- 한·중·일 FTA/정상회담 등 유대 성숙
- 한·중·일 삼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 가시화
- 미·중·일 삼국구도 약화, 미·중 양극구도 부각
- 미·중간 경쟁-물밑 타협관계

I

II

III

IV

V

- 중·일관계의 전반적 안정 추세 속 동중국해 해양 갈등
-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 확대
- 중·러 간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 강화
- 중·러 전략적 동맹관계는 에너지 협력 필요성에 따라 유지됨
- 러시아의 한·중·일에 대한 동시베리아 석유 관련 영향력 증대
- 동북아 지역의 아시아 역내 관계의 중요성 증대
- 한·미·일 체제와 중·러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체제(SCO) 간 경쟁 관계
- 안보중심 역학관계에서 안보-경제 관계로 전환 시동
-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3단계 진행
- 6자회담의 (5개국간) 동북아 다자 협의체 발전 모색
- 동아시아 시민네트워크 확대 (교과서, 위안부, 역사문제)

다. 향후 5년 동북아 정세 변동 요인

앞으로 5년 간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주는 이와 같은 많은 요인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동 요인이 존재하며, 그 변동 요인의 향배에 따라 동북아 정세의 진로 향배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첫째,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 중에서 누가 집권하는 가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외교 노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만약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가 당선하는 경우, 미국은 힘과 동맹을 중심개념으로 하여,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 중국에 대해 보다 견제적 입장을 취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하는 경우, 설득과 다자주의를 중심 개념으로 하면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중국과 협력 강화, 북한에 대한 적

극적 관여정책,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가입 문제였다. 만약 미국의 신행 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안보 연대망(미-일-호주-한국-인도)을 강화하고,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제에 가입하는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즉 동북아에서 안보 대립구조가 심화되고, 북핵 해법 도출이 어려우며, 남북한 긴장구조가 완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매우 강력히 대두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세 번째로 동북아 정세의 향배에 큰 파장을 줄 변동 요인은 비핵화 3단계 성공 여부였다. 이것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동북아 전반 정세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 북한 경제의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수립 등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여러 상황이 진전하지 못하고 북한은 여전히 동북아 불안요인으로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밖에도, 민족주의, 인권 문제 등 중국 내정의 불안 요인, 북한의 내정 불안 요인 등의 향배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2. 향후 5년 남북관계

가. 향후 5년 남북관계 정세 주요 방향

여기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남북관계 양상을 규정할 요인들을 남북한 관계 차원에 국한해서 살펴본다. 대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5년 동

I
II
III
IV
V

안에도 그 동안 영향 요인이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년 또는 10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보수적 안보·외교·대북정책의 추진, 사회 전반적인 보수성의 강화에 의해 상황 전개가 크게 영향받을 전망이다. 먼저 5년 간 지속성 경향이 큰 요인을 살펴본다.

남북관계 형성에서 북한측 유발 변수(대내 안정, 비핵화 여부 등)를 제외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의 대북정책 지향성, 그 고수 또는 변화 가능성이 남북관계의 방향과 내용을 크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내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양상과 내용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국회 의석 3분의 2 가량이 보수성향 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것과, 집권여당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보수 야당의 존재가 고려되어야 한다(이점에 관해서는 3장 4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대외정책, 대남정책, 대내정책에서의 북한 정부의 추진의도와 목표는 지난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관계 및 대남정책 의도와 관련하여, 북한은 한국측의 정책 정향과 내부정치가 열어주는 기회의 창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대응성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대남정책의 의도와 방향은 한국에서의 보수정부의 등장, 한·미공조의 강화 등 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보수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남정책 사이에는 과거와 비교할 때 보다 넓은 간극이 존재한다.

남북한관계에서의 상황에서는 불안정 요인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 하에서 발전되어온 남북관계가 당분간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당국간 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개되기 이전까지 상당한 긴장 요인이 상존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기존의 발전

수준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이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중간한 긴장과 협력 상황을 유지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

나. 향후 5년 남북관계 정세 불변 요인

먼저 앞으로 5년 간의 남북관계 정세에서, 큰 변화없이 지속될 추세, 또는 예측가능한 사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

-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정책 지향
- 북한 상황 및 남북관계 판단에서 보수성
- 집권 정당성에서 남북관계 관련 요인의 비중 저하
- 경제 우선의 사고

〈한국의 체제 내부 상황〉

- 국회에서는 보수파가 3분의 2에 달하는 다수를 차지하지만, 분열되어 있는 한편, 원내 야당의 취약으로 거리투쟁 확산 가능성
- 국제 경제환경 난조 및 경제정책 미숙으로 대신 공약인 경제살리기에 성과가 나지 않음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정국 주도력 약화
- 보수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가 취약한 경우, 남남갈등 확대 전개
- 식량가격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북지원의 부담 증대

〈북한의 대외정책〉

- 비핵화 3단계 과정에서 비용 최소, 보상 최대 전략 추진 (비핵화의 진전 또는 정체 가능성)

I

II

III

IV

V

- 외교관계 다원화 정책 지속 시도 (미국, 일본, EU와의 관계 개선, 러시아와 관계 증진)
-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의존 최소화 정책
- 체제보존형 보수적 대외경제관계 확대 추진 (무상 지원, 자원 개발, 특구 확대 등)

〈북한 정부의 대남정책〉

- 핵 폐기문제를 지렛대로 미국과의 관계 수립 및 대 한국 외교 우세 확보 노력
- 비핵화를 지렛대로 한반도 평화 관련 협상에서 협상력 우세 확보
- 남북 당국간 관계에서 우세한 거래조건 유지 노력 (지원 증대, 북한 외교 정책에 지지 확보, 김정일 체제 인정, 한국 내 우호 세력 확산 등)
- 한국 정부를 우회하여 한국 내 야당적 정치세력과 연대 확대 모색 (남남갈등 조장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협상력 약화)
- 개혁·개방을 최소화하고 내부정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남북경제협력 모색
- 군사 긴장조성에 대한 협박 또는 실제 작전에 의한 한국의 정부와 사회의 태도 변화 유도

〈지난 10년 간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와 남북경협〉

- 남북한 당국 모두 긴장고조에 부담
- 북한은 경제난으로 한국과의 관계 지속 필요
- 한국은 내부 여론 압력 존재,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주변환경 필요
- 남북간 관계가 난조인 경우, 남북한 모두 주변국에 대한 발언권 약화



- 이명박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 정체 또는 극적 확대 여부
- 개성, 금강산사업의 지속, 인도지원

다. 향후 5년 남북관계 정세 변동 요인

앞으로 5년 간의 남북관계의 전개에는 여러 변동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변동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의 남북당국관계에 대한 정책의지의 변동 여부이다. 여러 요인이 이 정책의지의 변화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여부를 보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변경에 대한 대내정치적 압력의 유무고조 여부이다. 만약 상대적 또는 절대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난조가 지속되는 경우, 한국 내부에서 정책변경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여부이다. 일단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당국간 관계를 동결시킨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은 내부 안정 유지를 위해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 상당히 절실한 상태이다. 일단 북한은 한국 정부 이외에 대외원조 수취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이거나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냐에 따라, 다음 남북당국관계 재개의 시기에 북한 당국의 협상력이 좌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셋째,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당국간 협상을 재개할 때의 상대적 협상력의 양상에 따라 그 이후의 남북관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재개 당시에 남북당국관계 재개에 대해 남과 북 어느 측이 더 절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이후의 남북관계가 남과 북 그 어느

I
II
III
IV
V

측에 보다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넷째로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비핵화의 진전 여부, 그에 따른 미·북관계의 진전 여부이다. 그렇지만 이 요인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양상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남북당국관계의 재개 또는 동결의 지속을 결단내리게 하는 배경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다섯째 변동 요인은 식량난 악화 등 북한의 내부 상황이지만, 이것도 남북관계에서 북한 정부의 협상력에 영향을 주는 종속 변수로 파악할 수 있다.

3. 향후 5년 북한내부 정세

가. 향후 5년 북한내부 정세 주요 방향

이명박 정부 5년이 마감하는 2012년까지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2년까지 북한의 대내정세는 현재의 상황에서 뚜렷한 개선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의 대내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강약이나 경향성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작용할 것, 또는 변동이 있더라도 현재와 같은 방식의 안정을 크게 깨뜨리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의 안정 상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많은 잠재적 불안 요소가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일의 건강, 정권과 사회의 긴장된 관계, 북한내부의 수출 잠재력 고갈, 북한 당국의 고식적 대내정책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정치적 억제로는 다루기 어려운 것들도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등에 의해,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북한 당국이 선호하

는 현재의 상황이 온존해 갈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지속적으로 공급 될 것이다.

나. 향후 5년 북한내부 정세 불변 요인

- 경제난의 지속, 자연재해의 빈발
- 시장의 확산,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한 피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
- 내부 양극화의 전개
- 외부사조의 유입 증가
- 내부 불만 통제를 위한 강압정책 지속
- 중상층 간부의 세대교체 지속
- 외부 원조 수취의 적고 많음에 따라 내부경제 상황 변화
- 국가 통제력의 약화와 국가-사회 간의 점증하는 긴장
- 외부 유입 정보의 증가 및 이에 대한 정권의 방어와 탄압 정책
-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반미'주의 변화 및 대체재 모색 필요
- 국가의 예산 수입 증가, 통제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내부 정책 강화
- 집단 및 지역적 차별에 의한 체제유지 정책 (체제유지 핵심집단 및 지역 대 그 밖의 집단 및 지역 간 차별)
- 김정일 개인독재 하에서 군부, 내각, 당 기구의 견제와 균형
- 국방공업우선주의 원칙 하에서 농업·경공업 생산 증대 노력

다. 향후 5년 북한내부 정세 변동 요인

앞으로 5년 간 북한내부 정세에는 많은 변동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부분의 요인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것들이

I
II
III
IV
V

다. 다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동 요인이 실제로 현재화하게 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한 파급력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김정일의 건강 상태였다. 그런데 이는 상당한 정도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자각적 결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의 상층엘리트 그룹이 후계체제 수립 문제를 둘러싸고 또는 대내외 정책 수정 문제를 놓고 분열할 수 있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지만, 이의 개연성에는 큰 비중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외부 사조 침투 증가와 주민의 전반적 자율권 신장, 국가의 전통적 통제력 약화와 새로운 통제력 수립 시도 노력의 사이에서 정권-주민간 긴장 강화에 따라 내부 불안 요인이 현재화할 수도 있다.

변동 요인 중에서 의식적 결정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대내외 정책을 수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에선 대표적으로 북한 당국이 핵 포기를 향한 과정에 순응해갈 것인지 아니면 결단코 저항하게 될 것인지 여부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이미 발생한 북한 사회 내의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개혁과 개방의 추진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인가의 여부이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갈 것인가도 앞으로 북한의 내부 정세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의 상황이 주변국으로부터의 원조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또한 북·미, 북·일관계 개선의 호조 또는 정체는 대외경제 개방, 새로운 정보와 문화의 침투, 정치 이데올로기 수정 등 내부 정치 파급력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가 중요하다. 이는 북한 당국

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변수가 될 뿐 아니라, 동북아 각국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배경이 될 것이다. 중국도 자체의 경제적 호조 또는 난조, 내부의 사회정치문제 악화 또는 완화 여부 등 내부 불확실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중국의 대내외 정책 변화도 북한에 파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5년 한국의 대내정치

가. 향후 5년 한국의 대내정치 정세 주요 방향

한국의 대내정치 전개양상은 정부와 여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적 추진력과 관계가 있다. 만약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정국 주도력이 비교적 확고하다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내부논쟁의 정치적 관리측면에서나 한국 정부의 북한 당국의 협상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대내정치적 측면에서나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가 비교적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한국 국내정치의 여러 구성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여당과 보수 세력이 국회에서 다수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정국 주도력은 상당히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전통적·사회적·정치적 갈등 요소에 부가하여, 일련의 요인들이 정국 주도력 약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과 여당은 경기살리기를 최대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측면이 큰데, 대외경제 여건의 약화로 이 점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다른 여러 정책의제를 다루는 데서 성과가 미진한 경우, 이것이 복합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I
II
III
IV
V

의 정국 주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로, 한국 사회의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내부정치의 동태성 자체가 대통령, 정부, 정당 등 기존의 제도화된 정치 행위자의 역할에 큰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유동성과 변동성이 큰 집단에 의해 의제가 제기되고 형성되면서, 이것이 기존의 정당구조를 우회하여 사회와 정치에 직접적으로 의제화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야당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실체가 모호한 시민그룹과 거의 모든 정치 및 정책 의제를 놓고 직접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셋째로, 앞으로 5년 동안의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한국 내부에서 이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압력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기존 경제협력 사업자가 존재한다. 또한 남북경협 사업의 확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자체와 주민, 대중소 기업가, 학자 등 전문가 집단, 남북협력 관련 NGOs 등이 존재한다. 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자면, 먼저 보수적 경향의 정치압력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에는 남북자 단체, 탈북자 단체, 보수적 이념 단체 등이 있다.

나. 향후 5년 한국의 대내정치 정세 불변 요인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 가능성〉

- 보수 세력 내부의 분열 지속
- 경제회복 실패, 대북정책 실패 등 정책 성과 미흡
- 한나라당 정치력이 취약하여, 정부와 국민 간에 완충 역할 미비, 그로 인한 정부와 야당적 시민그룹과의 직접 충돌

〈남남갈등 증폭에 따른 내부 분열 가속화〉

- 주요 공약 사업 이행에 대한 논쟁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
- ‘친미’ 대 ‘반미’의 대립 구도 격화 (방위비 부담 증액, 미사일 방어 체제 등에의 참가관련)
- 경제살리기 정책 과정에서 성과가 미진한 경우 빈부 격차 심화
- 지역 발전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 증대 (균형발전 정책, 세종시 건설 등)

〈정보화 사회의 심화에 따른 정치 역학의 변동〉

- 정부와 여당의 의제 주도력 약화 (야당, 시민사회, 사회내 하위층의 견제력 강화, 여당의 낮은 지지율)
- 사회 내 정치권력층 다양화 (시민 참여 확대)
- 정부 의회 간 견제 심화, 정부 민간 구분 약화
- 시민사회의 정당 역할 부분적으로 대체 (정당기능의 약화)
- 정부 정책 실패시 사회내 저항 빈도수 증가 (빈번한 소규모 논쟁)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과 관련한 한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증대〉

- 대북협력사업 관련한 NGOs의 역할과 수적 증대 (진보와 보수 망라)
- 지방 정부의 독자적으로 대북협력사업 추진 시도 증가
- 접경지대 지자체의 대북사업 이해관계 증대 (한강 하구 개발, 서해 평화협력 지대, 나들섬 개발 추진 여부, 기타 접경지대 대북협력 사업 추진의 방식과 여부 등)
- 탈북자의 조직 강화와 정치세력화 모색

I

II

III

IV

V

다. 향후 5년 한국의 대내정치 정세 변동 요인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대내정치를 살필 때, 가장 큰 변동 요인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는가 아닌가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당국이 호응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되는 경우, 대북정책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대북정책은 국내정치 정국 관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정국 주도력이 약화되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은 기존의 대북정책 원칙을 지속적으로 고수할 가능성이 변경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회 의석 분포에서 보수파가 3분의 2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렇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여당을 한편으로 하고, 유동적이지만 때때로 큰 결집력과 정치효과를 발휘하는 시민그룹과 운동 사이에 직접적 충돌이 잦아질 수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남북대화 재개 또는 진행 과정에서 한국의 내부정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높일 수 있다.

IV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1. 주요 변수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는 불변 요소와 변동 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전개된다. 위에서 언급된 많은 불변 요소가 일정한 배경 상황을 구성해 내며, 이 속에서 변동 요소들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전환적 국면과 사건은 전체 과정 진행의 방향과 동태성을 여러 갈래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여기서 변동 요소들을 다시 한 번 환기해 보면,

동북아 정세 변동 요소:

- 2008년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또는 공화당 행정부 출범
-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가입 여부
- 비핵화 3단계의 성공 여부

남북관계 정세 변동 요소:

-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경 여부
- 북한 당국의 대남정책 변화 여부
- 남북당국 재협상 당시의 협상력 차이
- 비핵화 진전 및 북·미관계 개선 여부

북한내부 정세 변동 요소:

- 김정일 건강 유지 여부
- 비핵화 추진, 개혁개방에로의 정치적 결단 여부
- 후계체제 구축 또는 다른 요인에 상층부 권력 투쟁 발생 여부
- 주변국 관계 호조 또는 악화 여부

한국 대내정치 정세 변동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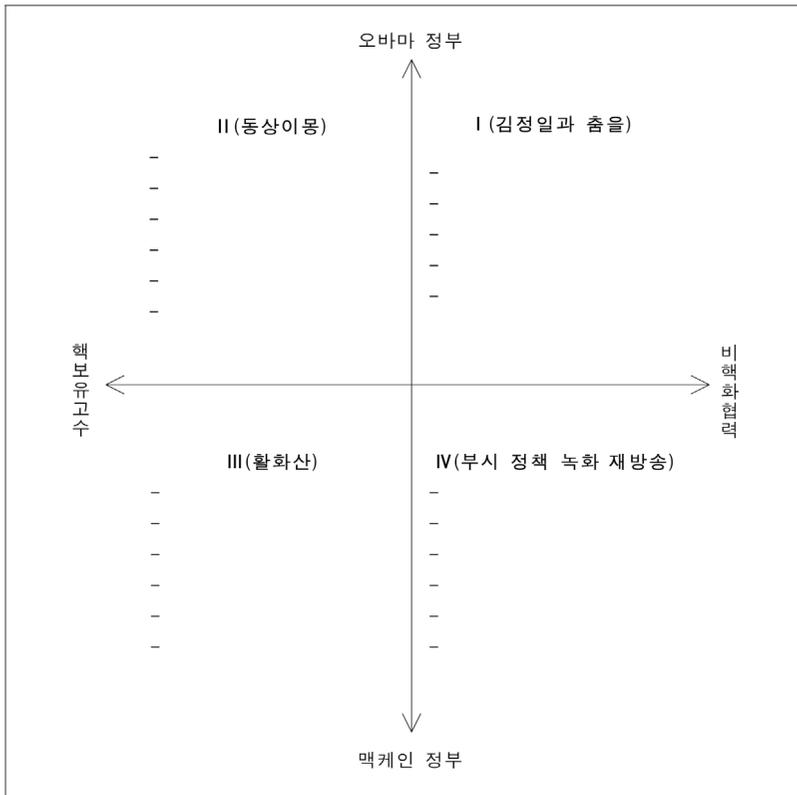
- 정국 주도력 약화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력 저하 또는 정책 수정 여부

시나리오 기법의 다음 절차는 이와 같은 여러 변동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변동 요인을 놓고 시나리오 기법 워크숍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는 토론과 투표를 거쳐서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의 전개에 가장 핵심적인 변동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선정했다. 즉,

- 첫째,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즉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 또는 공화당의 맥케인 정부인가의 여부
- 둘째,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의 여부

향후 5년의 남북관계 전개 시나리오를 구상하는데서 한국의 대북정책의 양상도 핵심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일단 논외로 하기로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검토한 이후에, 한국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한국의 국가이익과 운신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두 개의 변수를 조합하면 네 개의 시나리오 도면을 얻을 수 있고 각 시나리오마다 식별을 위해 명칭을 부여해 보면, 아래와 같다.

I
II
III
IV
V



2. 시나리오별 전개 양상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전개한다. 네 가지 시나리오의 설정과 편의상의 명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사면: '김정일과 춤을': 오바마 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제2사면: '동상이몽': 오바마 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

제3사면: '활화산': 맥케인 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

제4사면: '부시 정책 녹화 재방송': 맥케인 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가. ‘김정일과 춤을’: 오바마 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요약〉

오바마 정부는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기로 결정한다. 그 일차적 과제로 미·북 간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민주당 정부는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 속에서 과거 클린턴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대북정책의 기초하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동아시아에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핵폐기 문제에서 적극적 협력을 구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적극적 관여정책,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통일적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 북한은 일시 저항하지만, 결국 협상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시나리오〉

2008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신행정부는 전반적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착수한다.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의제 일순위는 여전히 이라크 전쟁, 이란의 핵무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포괄하는 중동문제이다. 중동문제가 당면 현안인 것에는 틀림없지만, 미국 신행정부는 앞으로 10~20년 후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한다. 가장 역동적인 지역인 동아시아에서의 여러 변화, 특히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처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패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된다. 사실 부시 정부 8년 동안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집중한 나머지, 동아시아에 소홀했으며, 역동적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있어왔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I
II
III
IV
V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주요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한다.

3월 경 신행정부 내에 대북정책 검토 그룹이 결성된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신행정부 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해법에 관한 정책적 이견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9·19 합의, 2·13 합의, 10·3 합의 등에 기초하여 비핵화 2단계를 완료한 성과와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행정부에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던 인사들이 다수 관여하여, 동북아 및 북한 핵 문제 해결 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4월 경 뉴욕 타임즈는 미국 신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북간에 대협상(Grand Bargain)론에 입각하여 북한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외교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는 한편, 그에 상응하여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미국은 주변국과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에 나선다는 것이다.

4월 말 새로운 대북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가 도쿄에서 개최된다. 미국의 동아태부차관보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5월 초 신임 국무장관은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고위급 인사로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임명한다. 신임 국무장관은 올브라이트와 나란히 서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천명한다. 미국 신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워싱턴이 강력하고 주도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는 정책입장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대결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면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전쟁의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며,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조기 종료와 재래식 군사 대결위험을 감소
- ▼ 워싱턴은 북한과 미국 뿐 아니라 북한과 도쿄 사이의 정치적·경제적 전면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추진
- ▼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한국전쟁의 정전 상태를 종료하기 위한 평화 조약의 체결
- ▼ 6자회담을 발전시켜, 동북아시아 평화안보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
- ▼ 미국은 가능한 경우 직접 원조, 한국과 다른 국가의 노력,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를 개방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 ▼ 관계정상화의 전반 관계의 일부로, 워싱턴은 북한 내부 인권 상황 개선에서의 진전을 추진

5월 중순 미국 국무부는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했음을 밝힌다. 아울러 신행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의지를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올브라이트를 평양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힌다.

5월 말 북한 외무성은 미국 신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I
II
III
IV
V

조건을 내거는 성명을 발표한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북한은 이 모든 것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도 북한이 미국의 의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상당기간 보유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6월 초 미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공세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올브라이트는 6월 중순 중국, 한국, 일본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한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북한을 적극 설득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고양된 지위와 능력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중국의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국이 '책임있는 당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동북아에서 미-일-중 삼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시사한다.

중국은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고, 7월 경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여 북한을 가히 강압적으로 설득한다. 중국의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화된 미·중관계 진전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 올림픽 개최 이후 내부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위해 미국의 협조를 필요로 했으며, 한반도에서 또 다른 긴장고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배신'에 대해 반발하고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간다. 이에 대응하여 6자회담의 6자에서 북한을 뺀 5자회담이 개최되는 한편,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평화안보회의 수립 추진 제안이 논의된다. 또한 북한의 강경한 자세 때문에 주변국가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면서, 경제난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9월 경 김정일과 주요 지도부가 베이징을 방문한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중국 지도부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 인민일보는 중국 지도부가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이례적으로 보도한다. 주변국의 압력과 경제난 심화, 미국의 적극적 관여정책에 직면한 북한의 자세는 2009년 겨울에 접어들면서 완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2010년 1월 1일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1월 초 외무성 성명을 통해, 대북 특사 올브라이트의 북한 방문을 환영한다고 천명한다. 북한 외무성은 올브라이트의 평양 재방문시 미·북간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로드맵과 정책원칙을 밝히는 새로운 미·북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를 원한다고 밝힌다. 이에 미 국무부는 긍정적으로 화답한다.

이에 따라 1월 중순 2000년 10월에 채택되었던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갱신하기 위한 외교적 접촉이 시작된다. 미국과 북한은 뉴욕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뉴욕주재 북한 외교관을 워싱턴에 초청한다.

1월 하순에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한-미-일 삼각정책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이 회의는 북·미 공동코뮤니케 내용을 사전 협의한다.

2010년 3월 올브라이트 북한문제 전담관은 도쿄와 서울을 거쳐, 육로로 평양을 방문한다. 올브라이트는 먼저 김영남을 만난다. 김영남은 워싱턴이 평양의 핵 국가 지위를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러나 올브라이트는 이를 단호한 어조로 거부한다. 동행했던 뉴욕타임즈 기자는 북·미 합의가 실패했다고 타전한다. 그러나 다음 날 올브라이트와 만난 김정일은 이를 거론하지 않는다.

I
II
III
IV
V

4월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재차 워싱턴을 방문하여 새로운 북·미 공동코뮤니케에 합의한다. 이 코뮤니케는 앞으로의 북·미관계를 규정하고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이 상호 의도를 확인한다. 이 코뮤니케는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2005년 9·19 선언이 유효함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공동코뮤니케는 미국과 북한은 “어느 측도 상대측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과거 적대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천명한다. 또한 2005년 9월 선언에 담겨있던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한다, “양 측의 주권을 존중한다”, “평화적으로 공존한다” 등의 원칙을 재확인한다. 또한 6자회담 과정에서 정립된 협상의 원칙인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2000년 북·미 공동선언에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자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도 재확인한다.

북·미 간에 신 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된 한 달 후 2010년 5월 6자회담이 열린다. 다른 참가국들은 북·미 간의 관계 진전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6자회담 개최 전후로 미국은 주도적이고 강력한 외교를 전개한다. 한국 및 일본과 삼각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미·중 대화를 통해 다른 주변국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보장받는다.

7월 재개된 북·미 양자회담에서 미국은 북·미 공동코뮤니케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러 현안 해결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차원의 강도 높은 협상을 시작할 것을 북한에게 요구한다. 미국은 최우선 의제로 비핵화 3단계를 제시한다. 즉 북한 핵 무기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폐기의 문제로서, 북한의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 핵 물질, 폭탄, 기자재의 조속한 국외 반출, 핵 시설의 조속한 폐기가 주요 주제이다.

7월 이후 미국과 북한은 여러 현안에 대한 다각적 협상을 시작한다. 우선 비핵화 3단계에서 미·북 간에 행동 대 행동에 입각한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북·미는 평양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력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한-미-북 간의 3자 군사회담이 시작된다. 이 회담은 이어 중국이 참가하는 4자 한반도 평화포럼으로 발전한다. 이 평화포럼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상태를 종결하고 새로운 영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1년 1월 1일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 북·미 간의 본격적 비핵화 협상의 개시와 동시에 북·미는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협상에 진입한 결과이다. 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미국 동아태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미국은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6월 경까지 미국의 북한경제발전 지원 정책의 여러 징후가 나타난다. 북한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가맹 신청을 하자 미국은 반대하지 않는다. 건설이 중단되었던 실포 경수로 건설 공사가 재개된다. 이의 관리를 위한 신 KEDO가 설립된다. 미국은 또한 북·일 관계정상화를 환영하면서, 일본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

7월 경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권 대화와 내부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농축 우라늄에 대해 북한이 모든 것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이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8월 미국은 한반도 평화기금을 설치할 것을 선포한다. 이는 자신의 적극적 정책의지를 과시하고 주변국의 적극적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I
II
III
IV
V

것이다. 한반도 평화기금은 비핵화 과정에서의 핵 폐기 관련 비용, 경수로 건설 비용, 한반도 재래식 군사 긴장완화, 북한 경제 개발에의 기여, 위폐 방지를 위한 북한 은행 체계 개선, 미국에의 북한 유학생 파견을 포함 미·북 간 문화교류 등에 사용될 것이라 한다.

2012년 미국과 북한은 2012년 1월 1일을 기해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선포한다. 5월 김정일은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을 거쳐 직항로로 휴전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한다.

나. ‘동상이몽’: 오바마 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

〈요약〉

오바마 정부는 클린턴 정부시절에 추진되었던 대북 관여정책을 재추진한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약점으로 이해하고 보유 핵무기 폐기에 대하여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다. 이는 미국이나 주변국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미·북관계는 재차 악화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있게 된다. 북한은 한국에게도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

〈시나리오〉

2009년 2월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민주당 오바마(Barack Obama) 후보가 취임한다. 그는 2008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맥케인(John McCain)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따라서 그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행동을 자제한다.

3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을 조정하도록 지시한다. 그 기본방향은 부시 대통령이 구사하였던 일방주의와 군사력 중



시 외교를 탈피할 것이다. 그 대신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다자주의와 더불어 경성국력과 연성국력을 함께 구사하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추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고위 북핵담당관을 임명하고,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한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성과를 이어받을 것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클린턴 정부시절에 추진하였던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미국 국내여론을 통합하여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더불어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회담도 병행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5월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전환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밝히면서, 21세기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다.

6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순방 정상회담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의 3국 방문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과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중국방문에 있어서는 미·중 국교정상화 30주년 의의를 강조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 모두에게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4국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특히 서울에 와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서 신관여정책(New Engagement Policy)을 천명한다.

7월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미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 북한은 대미관계 수립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을 백년 숙적으로 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양자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도 이에 적극 호응할 것임을 밝힌다.

8월 미국은 미 국무장관과 고위 북핵담당관으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케 한다. 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방향을 전달한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방미를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초청한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방미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전에 먼저 국가대표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다. 또한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어지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핵문제도 해결될 것임을 주장한다.

10월 이 같은 과정에서 비핵화 3단계를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된다. 북한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전제로 3단계 비핵화 전개에 대한 북한의 조건을 내세운다. 여기에는 북·미, 북·일수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경수로 제공, 북한에 대한 내정불간섭과 함께, 동북아 핵국가인 미국, 중국, 북한 간에 동북아 핵군축에 대한 회의가 새로이 들어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군 철수를 전제로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항구적인 북·미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된다.

12월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진전 없이 종료된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유관국 책임만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2010년 2월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 변화가 없음을 비판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강성대국 대문을 열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한다.

3월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다소 불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남북경협



확대 분위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편 미국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오바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 핵심 비판 내용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북한 김정일 정권한테 속고 있다는 것이다.

7월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미 추종적 자세에 대한 반발로 신형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고 큰 성공을 거둔다. 북한은 이를 통해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국내적으로 강조·과시함을 통하여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안정화를 꾀한다.

10월 북한은 당창건 65주년을 맞이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식 사회주의체제 사수를 위한 핵무기 보유’ 의지를 재천명한다. 그리고 이란과의 핵개발협력을 다시 시도한다.

11월 유엔은 북핵실험(2006.10.9)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결의안을 다시 적극 추진할 것임을 재결의한다. 이 결과 6자회담은 완전 무실화 상태에 처하게 된다.

12월 미국 민주당의 대북 유연정책과 안보정책은 안보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이 와중에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남 유화 정책을 적극 전개한다. 예컨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남북대화 재개 및 다각도의 협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2011년 1월 미국 민주당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해 종합적인 강경한 대응정책을 발표한다. 대북정책으로는 대북 봉쇄정책 진행과 더불어 향후 북핵 시설 폭파 가능성도 시사한다. 대중정책으로는 중국과의 협의 하에 대북 봉쇄를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대한정책으로는

I
II
III
IV
V

한국의 PSI 가입 및 대북제재 동참을 강력 제안한다. 또한 대규모의 대북경협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다자정책으로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를 제안한다.

3월 미국은 대북 지원중단을 한국과 중국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난이 다시 심화된다.

4월 미국은 한국의 PSI 전면가입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된다.

5월 북한 김정일 정권 또한 대미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한다. 이 와중에 북한은 중국과 남한의 대북정책 진의를 비공개리에 타진한다. 이후 중국과 남한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정권 붕괴 유도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될 경우, 북한은 대중관계 개선 으뜸정책, 대남관계 개선 버금정책을 구사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력을 극복해내고자 한다.

6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겸 당 총서기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을 극복하는 동시에 북핵 보유의 제한적 정당성을 중국지도부에 설득한다. 물론 북한은 핵무기를 공식적으로는 포기할 것임을 재천명한다. 그러나 기왕에 개발한 핵무기를 모두 투명하게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중국으로부터 보장받고자 노력한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기를 더 이상 운운하지는 않을 것임도 천명한다.

8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도 호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을 확대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상당한 대규모의 대북경협 및 지원이 이뤄질 경우, 남북정상회담에도 적극 참석할 수 있음을 비선을 통해 전달해 온다. 이 당시 북한정세는 체제 불안정화(경제 및 식량난 심화)와 김정일 정권 안정화 경향성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



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온다. 반대로 한국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10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강화를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2012년 1월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미국의 압살 정책으로 좌절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대미 항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김정일 장군의 위업을 대를 이어 지속 추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2월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경제 및 군사적 제재를 진행한다.

3월 한반도에서 미묘한 흐름이 발생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미 동맹관계가 이완되는 동시에 한국의 대일관계가 독도를 중심으로 재발하게 되며, 대중관계 또한 만주 영토 및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재발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남북군사적 긴장가능성이 북한 군부에 의해 강조된다.

4월 북한에서 대량 아사자 사태가 발생하며, 탈북주민이 대규모로 늘어난다.

5월 북한은 내부 불안정 상태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주변국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한반도에서 분쟁상태를 만들기 위해 대남도발을 감행한다. 제3차 서해교전과 함께 중부전선에서 총격전이 전개된다.

8월 중국은 북한의 대량난민을 막기 위해 중·북한 국경지대를 전면 봉쇄한다.

10월 북한은 당창건 70주년 기념대회에서 핵무기 포기가능성을 포함한 대외 유화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남한의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음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음을 고려하여 새로운 정부가 남한과 미국에 들어설 경우, 전면적으로 남북관계 및 대미관계를 전향

I
II
III
IV
V

적으로 풀 의사가 있음을 적극 제시하면서, 남한의 진보정권 등장과 보다 전향적인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을 유도한다.

다. ‘활화산’: 맥케인 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

〈요약〉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불량국가의 핵무기 개발 및 테러지원 등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맥케인 정부가 북핵폐기를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 PSI 실시,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 재적용 등의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 북한 정권 역시 맥케인 정부의 강경한 정책에 맞서서 강공정책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은 핵보유를 고집하면서 불능화 약속을 파기하고, 신형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물론, 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 또한 그동안 숨겨두었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도발적인 조치를 취한다. 식량난의 심화로 북한 내정이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김정일 유고사태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 상황이 활화산처럼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다.

〈시나리오〉

2008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에게 신승한 맥케인이 2009년 2월 제44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맥케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세계의 핵무기 수를 대폭 감축하고, 핵무기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 외교안보 목표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이란, 시리아를 거명하면서 NPT 등 국제규범에 의거해서 이들 세 나라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근절하겠다는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다. 맥케인 대통령은 불량국가의 핵폐기를 위한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부시 행정부 1기에서 제시되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즉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제시한다. 아울러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테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주국가 동맹”(a league of democracies)의 구성을 제의한다.

2009년 6월 맥케인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 3개국을 방문한다. 맥케인 대통령의 최초 동북아 순방의 주요 목적은 북핵폐기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 순방에서, 맥케인 대통령은 북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맥케인 정부의 구상과 정책을 설명하고, 3국 정부의 동의와 협조를 구한다. 맥케인 정부의 기본구상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문제를 야기한 북한이 먼저 핵폐기를 단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북압박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맥케인 대통령은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6자회담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마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고, “민주국가 동맹” 이념에 입각하여 대북압박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을 제의한다.

2009년 7월 조선중앙통신은 맥케인 정부의 대북압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6자회담 합의사항인 불능화 조치를 파기하겠다는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원상으로 복원해서 재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참가국들은 2009년 8월 북경에서 회동, 북핵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에 대해서 불능화 조치 파기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I
II
III
IV
V

2009년 9월 중국 외교부는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을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평양과 미국에 파견한다. 리자오싱 특사는 김정일을 만나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고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뒤이어 미국을 방문한 리자오싱 특사는 맥케인 대통령을 면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북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중재는 실패한다. 맥케인 정부의 “민주국가 동맹” 이념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던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형식을 빌어서, 북핵 중재노력이 실패하자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동북아 정세를 냉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맥케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2009년 10월 북한 선박에 대한 PSI가 실시된다. 남포항을 출발 중 동으로 향하던 북한선박이 제주남단 공해상에서 PSI에 참가하는 연합국 함정들에 의해 정선된다. 북한선박은 PSI 요원들의 승선을 강력하게 거부, 장시간의 대치상태가 지속되다가, 중국정부의 중재로 일단 북한선박을 상해의 푸둥항으로 이송하기로 합의한다. PSI 요원들은 푸둥항에서 북한선박을 조사한 후, WMD 관련 물질과 장비의 확산에 관련된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방면한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고, 근거없는 대북압박이라며 맥케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한다.

2009년 11월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불능화조치를 파기하고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채택된 결의안 1718호를 다시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계기로, 2007년 2·13 합의 채택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다시 시작되고,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2010년 3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함경도 무수단리 미사일기지에서 사정거리 4,000km의 신형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이 2007년 7월에 발사되었다 실패한 미사일과 같은 유형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2010년 3월 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서방 정보소식통을 인용, 미사일 발사 당일 현장에 이란과 시리아의 군사고문단이 미사일 발사 상황을 참관했다고 보도한다.

2010년 여름, 뉴욕타임지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모두 중단해줄 것을 비공개로 요청했다고 보도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으나, 이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반미 촛불시위가 다시 촉발된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원치 않는 미국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긴장의 주범이라며 맥케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한다. 촛불시위대들은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 앞에서 농성과 데모를 계속한다.

2010년 10월 북한 정부는 특별성명을 내고 함경북도 길주군 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제2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실시되었다고 발표한다. 북한 정부는 제1차 핵실험이 있던 지 4년 만에 진행된 이 실험에서, 제1차 실험 당시 드러난 기술적인 결함들을 대부분 극복했다고 주장한다. 실험결과를 분석한 중국과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도 제2차 핵실험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북한은 실전사용이 가능한 핵무기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2010년 11월 북한은 남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I
II
III
IV
V

영국의 타임지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등 유수의 국제언론들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이 명실상부한 핵국으로 등장한 북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도한다. 핵실험으로 악화된 국내외 여론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 제의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2010년 12월 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6자회담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회담종료를 공식 선언한다. 동시에 미 국방부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공군이 보유한 최신형 F22 전투기를 오산과 군산에 배치하고 B1, B2 전략폭격기를 오키나와와 괌 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대응카드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한시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2011년 6월 서해상에서 NLL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다가 북한함정의 선제공격으로 남북간에 해상 무력충돌이 발생한다. 남한해군이 첨단 화력을 동원하여 결국 북한해군을 제압하지만, 선제공격을 당한 남한해군도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완전히 중단되며, 개성공단도 사실상 조업중단 상태에 돌입한다.

2011년 10월 HEU 문제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지 9주년에 즈음해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동안 존재자체를 부인했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평화적인 목적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공개하고,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심각한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이 우라늄 농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계속할 것이며, 이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한다.

2012년 6월 북·미관계 악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수년 째 악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 국지적인 소요와 민란이 발생한다. 함경북도 회령, 평안북도 신의주, 황해도 해주 등 각지에서 주민들이 식량배급소에 침입해서 식량을 약탈하고 이를 말리는 공안원들을 공격하는 등 사회질서 와해현상이 나타난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평양주재 외국인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무질서 상황을 신속히 보도하는 것은 물론, 평화재단 등 국내의 민간 NGO들도 북한 내부의 협조자들의 보고를 토대로 북한의 심각한 상황을 상세하게 전한다. 이즈음 독일 언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긴급 식량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2012년 8월 일본 NHK 방송이 긴급뉴스로 북한의 김정일이 유고 상태라고 보도한다. 한·미·중·일 4개국 정부는 보도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은 반면, 러시아 국영방송은 평양주재 외교관 소식통을 인용한다면서 김정일이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사령부는 정규전 최고 경계태세인 ‘데프콘 하나’를 발동하고, 동시에 대간첩작전 등 비정규전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도 발령하면서 전군이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한다.

라. ‘부시 정책 녹화 재방송’: 맥케인 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요약〉

출범 초기 맥케인은 매우 강경한 대북정책 원칙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동맹관계 강화를 천명한다. 이에 따라 부시 정부 하에서 북한과 미

I

II

III

IV

V

국 사이의 비핵화 진전은 무효화된다. 이에 북한은 강경대응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또 다시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에서 난조에 빠지게 되는 한편,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맥케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전격적으로 대북협상이 재개되고,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가 풀려나간다.

〈시나리오〉

2009년 2월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에 신승을 거둔 존 맥케인이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다시 들어선 공화당 정부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불량국가 핵무기 개발 및 테러지원 등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적이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를 요구한다.

5월 맥케인 미국 대통령은 동북아 전략구상을 밝힌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아시아의 지역조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천명한다. 특히 미·일동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지주이며, 일본이 정치력, 군사력, 자위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하는 등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 중상주의적 경제정책, 자유의 부재, 수단 등 문제국가에 우호적 외교정책에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 무기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신고, 불능화, 폐기하도록 강압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폐기, 납치자 문제 해결, 북한 인권 문제 등 미국의 동맹국

의 주요 우려 사항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맥케인 후보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부시 행정부의 초기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며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5월 북한의 대중매체는 일제히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격렬히 비난한다. 미국의 새 정책은 과거 부시 1기 정책보다 더 한 것이며, 그간 6자회담과 북·미 간에 합의되었던 9·19, 2·13, 10·3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공격한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위협한다.

6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한다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북한과의 협상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하며,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촉구한다.

6월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정일이 평양주재 중국 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었다고 전한다.

7월에는 도쿄에서 한-미-일 삼각정책조정협회가 열리며, 여기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 한국의 비핵·개방·3000에 대한 지지가 천명된다. 일본은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한이 납치 문제에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대북 제재조치의 완전한 해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북 지원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한국과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

8월 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극비 방문이 언론에 일제히

I
II
III
IV
V

보도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비공개 면담을 나누는 한편, 중국 상하이, 광저우 등 여러 도시를 경제협력 차 순방하면서 대북투자 유치 외교를 활발히 전개한다.

8월 중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서 돌아온 후, 북한 외교부 성명이 발표된다. 북한은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면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한다. 만약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자위능력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음을 경고한다.

8월 하순 조선신보는 8월 초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북한과 중국이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을 밝힌다. 아울러 신의주, 남포, 청진 경제특별구역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공포한다.

9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맥케인 행정부의 대동북아 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게 핵 문제를 풀어갈 의사가 없다면,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다. 러시아의 이스베스치야는 러시아 전문가의 말을 빌어, 중국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한다.

9월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비확산을 경고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다. 워싱턴포스트 등에는 북한의 농축우라늄에 대한 새로운 의혹, 시리아와 이란과의 핵 협력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된다. 미국 언론은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 커넥션 의혹을 증폭시킨다. 지난해 북한이 제출했던 핵 신고서에 HEU 프로그램 증거가 발견되었으나 부시 행정부 당시 이를 숨겼다고 폭로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비난한다. 북·미관계가

급랭하면서 한국 여론도 지난 부시 행정부 시기 북·미간 핵협상이 북한
의 기만전술에 당한 것이라는 비난이 증폭된다.

11월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의혹에 대한 PSI 활동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검색활동을 공해상에서 단행한다. 북한은 이를 전쟁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한다. 북한은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회복하겠다고 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 의지를 표명한다.

11월에서 12월 동안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해상 NLL 군사
충돌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남한을 ‘동족
을 배신한 미제 앞잡이’라고 매도하면서 대남 협박 수준을 높여 나간
다. 이에 한국은 해외자본의 투자위축과 국가신인도 하락 가능성에 대
한 경제 불안 심리가 가중되며, 미국의 대북 강압정책에 대한 반미감정
이 고조된다.

2010년 3월 북한은 북·미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핵
시설 재가동을 시도함으로써 세계의 주목 속에 북·미간 긴장을 유발시
킨다. 같은 시기 맥케인 정부의 대외정책은 고립에 빠진다. 맥케인 정
부의 비판적 대중국 정책으로 미국은 경제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
지 못한다.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 그리고 세계 여러 곳의 문제국가들
과 관계를 강화한다. 미국의 중동에서의 입장도 혼미에 빠진다. 미국의
지속적인 이라크 개입 의지 천명으로 인해 이라크 내에서의 반미주의
가 고조되고, 이란이 이라크에 적극 개입하면서 사상자가 늘어난다. 아
울러 아프카니스탄 전황이 악화되지만, 미국은 나토국가와 일본의 충
분한 협조를 얻지 못한다.

3~4월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중동과 북한이라는 이중의 수렁에 빠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점증한다. 이에 미국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
사이에 맥케인 행정부의 대북 설득과 타협을 통한 적극적인 북핵 협상

I
II
III
IV
V

을 촉구하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 Nunn-Lugar 법안의 이론적 기초였던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협상안을 북한에 적용할 것을 권유한다.

4월 말이 되자, 미국이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난다. 중국의 대북포용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맥케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의의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다. 미국은 국무부 차관급의 대북협상 채널 가동을 시도하면서 베이징에서 북·미협상이 전격적으로 재개된다. 아울러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제3단계 논의가 시작된다.

5월 초 미국의 석유메이저 엑슨 모빌 사장의 방북으로 북한 서해 대륙붕 석유자원 개발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경수로 사업 재개 검토를 밝히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완전한 포기과 사찰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한국은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신포 지구의 경수로 공사 재개와 함께 대북에너지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한다.

5월 6자회담에서 3단계 핵 폐기 과정 진행을 위한 포괄적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6자회담과 별도로 북한과 미국은 베이징, 워싱턴과 뉴욕, 싱가포르, 베를린 등에서 다각적 접촉을 갖는다.

7월 경 마라톤 회담 끝에 핵폐기 3단계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발표된다. 북한의 핵폐기 합의를 통한 IAEA 검증·사찰 기술진이 방북하고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과 함께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금융기구 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북·일협상을 통해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요도호 납치범 본국 인수에 합의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방북단을 초청하는 한편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이 정례화 된다. 북한은 민수용 원자력 발전소 건

설 지원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수출관리법을 비롯한 다양한 대북경제 규제법안의 해제를 주장한다. 북한은 TKR-TSR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러시아와의 협력에 따라 청진-하산 간 철도연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 코레일의 합작투자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북한 개방의지를 대내적으로 과시한다. 북한은 중국 측에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은 신의주-평양 간 도로 건설 사업을 제의·추진하면서 북·중 관계는 한층 긴밀해진다. 또한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관광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남측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9월 북·미간 타협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핵폐기와 관계정상화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된다. 북한 핵폐기로 들어가는 ‘입구’와 최종적 핵폐기 완료 단계인 ‘출구’에 대한 북·미간 합의를 토대로 6자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문을 도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국면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9월 19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5주년을 축하하고,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위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인 미국, 중국, 한국, 북한 4개국의 평화포럼 가동이 시작된다. 북·미간 별도 채널을 통해 미사일 및 생·화학 협상이 개시된다.

11월 북한은 핵폐기의 입구인 신고서에 기반한 검증·사찰을 받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 경수로 제공 등 대미(對美) 보상을 둘러싸고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된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함께, ‘선 보상, 후 폐기’에 대한 미국과의 입장 차이로 회담은 결렬된다.

2011년 2월 북한은 미국에게 군사간 정례협의체인 ‘북·미 상호방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미국은 이를 전격 수용한다. 북·미간 군사적 전략대화가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조야가 발각 뒤 집힌다. 북한은 북·미 전략대화를 통해 미국 측에 미 군함의 청진항

I
II
III
IV
V

개방 의사를 타진한다. 중국 국가 부주석이 급히 평양을 방문하여 그 동안 사문화되었던 ‘조·중 우호조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연 50만 톤의 증유 지원과 함께 신의주 특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약속을 한다. 북한의 경수로 공사 재개가 결정되고, 한반도 평화포럼(4자)과 동북아 평화포럼(6자)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협상에 들어간다.

5월 북한의 핵탄두와 핵물질에 대한 사찰이 완료되면서 핵탄두 해체에 대한 대북 보상금 마련 문제가 타결되고 핵물질의 제3국으로의 반출이 결정된다. 일본의 대북배상금이 100억 달러로 결정되면서 지불 방식과 지불 시한에 합의를 본다. 또한 북·일 수교협상이 급진전하면서 곧바로 국교정상화 방침에 합의한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전격 합의하면서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 연락사무소 건물의 상호 교환 협상이 이루어진다.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북 개발지원금 1억 달러 결정과 함께 미국 투자단의 대규모 방북이 이루어진다.

7월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와 켄터키 치킨 평양지점 개설과 함께, 미국 시티은행 평양 사무소가 문을 연다.

10월 북한과 미국은 핵탄두 해체에 대한 보상금액과 지불장식에 대해 합의를 보면서, 본격적인 핵탄두 해체작업을 위해 IAEA 기술진이 대거 방북한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에 따라 공사 재개중인 신포 경수로 외에 남포에 제2의 한국형 경수로 건설이 합의되면서 청진항에 미국 항공모함이 일시 기항한다. 핵탄두 해체작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고 미국, 북한, 한국, 중국 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북·미수교를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와 함께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에 합의한다. 북한과 일본 사이의 전격적

인 수교가 단행된다.

2012년 2월 핵무기 완전 폐기완료 및 핵물질 반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교정상화로 나아가는 북·미수교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일을 공포한다. 존 맥케인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간의 세기적인 정상회담이 2월 16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이로써 북한 핵폐기 문제가 완료되면서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에로의 길이 활짝 열린다. 북한은 마침내 핵을 포기한 대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일, 북·미수교를 통한 체제안정을 보장받았고, 세계를 향한 개방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발전과 미래를 향한 정치개혁의 길을 선택한다.

I

II

III

IV

V

V

결론과 요약

외교 및 대북정책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관철하고 생존환경을 가장 유리하게 형성하는 것을 기조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자면, 외교 및 대북정책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의 구조적 추세 변화에 최적화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돌발 사건들에도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라는 차원에서 입안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안과 수행은 쉽지 않다. 미래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서 본 연구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사용했다. 여기서 이 기법은 앞으로 5년 간 한국의 대북정책 수행에 있어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5년 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작용하는 불변 요인과 변동 요인을 식별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불변 요인이 만들어내는 배경 상황 속에서, 여러 변동 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앞으로 5년 간의 정책 추진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앞으로 5년 동안 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정책 환경의 전반 구조적 추세와 함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전체 과정 진행의 방향과 동태성을 여러 갈래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의 구조적 변곡점 유무와 시기, 그리고 작용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봄으로써, 미래가 함축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식별해 내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대안 제시에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또는 이미 정책입장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책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게 될 것인가

를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08년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시나리오 플래닝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동북아 각국 정치, 남북관계, 북한내부, 한국 대내정치와 관련한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각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앞으로 5년 간의 상황전개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토론과 투표를 거쳐 분야별로 주요 상황 변동 요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동북아 정세 변동 요소:

- 2008년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또는 공화당 행정부 출범
-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가입 여부
- 비핵화 3단계의 성공 여부

남북관계 정세 변동 요소:

-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경 여부
- 북한 당국의 대남정책 변화 여부
- 남북 당국 재협상 당시의 협상력 차이
- 비핵화 진전 및 북·미관계 개선 여부

북한 내부 정세 변동 요소:

- 김정일 건강 유지 여부
- 비핵화 추진, 개혁·개방으로의 정치적 결단 여부
- 후계체제 구축 또는 다른 요인에 상층부 권력 투쟁 발생 여부
- 주변국 관계 호조 또는 악화 여부

I
II
III
IV
V

한국 대내정치 정세 변동 요소:

- 정국 주도력 약화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력 저하 또는 정책 수정 여부

이에 이러한 변동요인을 놓고 다시 토론과 투표를 거쳐서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의 전개에 가장 핵심적인 변동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선정했다. 즉,

- 첫째,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즉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 또는 공화당의 맥케인 정부인가의 여부
- 둘째,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의 여부

이 두 요인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 간 전개될 수 있는 남북관계 환경 및 전개와 관련하여 아래의 네 가지 시나리오가 상정되었다.

- 제1시나리오 <김정일과 춤을> : 오바마 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 제2시나리오 <동상이몽> : 오바마 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
- 제3시나리오 <활화산> : 맥케인 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
- 제4시나리오 <부시 정책 녹화 재방송>: 맥케인 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각 시나리오별 주요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김정일과 춤을>: 오바마 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오바마 정부는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기로 결정한다. 그 일차적 과제로 미·북 간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민주당 정부는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 속에서 과거

클린턴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대북정책의 기초 하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동아시아에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핵폐기 문제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구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정책,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통일적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 북한은 일시 저항하지만, 결국 협상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동상이몽>: 오바마 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

오바마 정부는 클린턴 정부시절에 추진되었던 대북 관여정책을 재추진한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약점으로 이해하고 보유 핵무기 폐기에 대하여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다. 이는 미국이나 주변국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미·북관계는 재차 악화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있게 된다. 북한은 한국에게도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

<활화산>: 맥케인 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

맥케인 정부는 북핵폐기를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 PSI 실시,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 재적용 등의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 북한 정권은 맥케인 정부의 강경한 정책에 맞서서 역시 강공정책으로 대응한다. 이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은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 불능화 약속을 파기하고, 신행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물론, 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 또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도발적인 조치를 취한다. 식량난의 심화, 김정일 유고사태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 상황이 활화산처럼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다.

I
II
III
IV
V

<부시 정책 녹화 재방송>: 맥케인 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출범 초기 맥케인은 매우 강경한 대북정책 원칙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동맹관계 강화를 천명한다. 이에 따라 부시 정부 하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진전은 무효화한다. 이에 북한은 강경대응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또 다시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에서 난조에 빠지게 되는 한편,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맥케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전격적으로 대북협상이 재개되고,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가 풀려나간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마츠 린드그렌·한스 반드홀드. 『시나리오 플래닝』. 필맥, 2005.
- 최향섭 외.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_____.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피터 슈워츠. 『미래를 읽는 기술』. 비즈니스북스, 2007.
- Van der Heijden, Kees. *Scenarios: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London: John Wiley & Sons, 1996.
- Van der Heijden, Kees. *The Sixth Sense: Accelerating Organizational Learning with Scenarios*. London: John Wiley & Sons, LTD. 2002.

2. 논문

- Weingartner, Miranda. “Dealing with uncertainty: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M. Martellini and R. Redaelli (Editors). *Cooperativ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the Aftermath of the latest Round of the 6-Party Talk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Como, Italy, 26 March 2007.

3. 기타

- Global Business Network. *Overview of Scenario Thinking Concepts*.

<www.gbn.com/whatif>

Scearce, Diana and Katherine Fulton, *What If? The Art of Scenario Thinking for Nonprofits*. Global Business Network, 2004.
<<http://www.gbn.com/ArticleDisplayServlet.srv?aid=32655>>.

1, 2차 워크숍 참가자 명단

■ 1차 워크숍

- 일 시 2008년 4월 30일(수), 09:00~18:00
- 장 소 신라호텔 오키드룸
- 참석자 김덕중(경기대), 김도태(충북대), 김명섭(연세대),
김병로(서울대),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신상진(광운대),
오일환(한양대),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이희옥(성균관대),
임을출(북한대학원대),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정낙근(여의도연구소), 최종철(국방대), 홍규덕(숙명여대),
허문영, 조민, 박형중, 전성훈, 서재진(이상 통일연구원)

■ 2차 워크숍

- 일 시 2008년 5월 14일(수), 09:00~18:00
- 장 소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 참석자 김덕중(경기대), 김병로(서울대),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신상진(광운대), 오일환(한양대),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이희옥(성균관대), 정성장(세종연구소),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최종철(국방대),
허문영, 조민, 박형중, 전성훈, 최진욱(이상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區域合作的新聯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동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2006	2005 독일통일백서	8,5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연례정보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전성훈, 조민, 허문영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 | | | |
|---------|--|---|
| 2006-01 |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 Kim Soo-Am |
| 2006-02 |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 Huh, Moon-Young |
| 2006-03 |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 Cho, Min |
| 2006-04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 Choi, soo-young |
| 2006-05 |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 Keumsoon Lee |
| 2006-06 |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 Cho, Jeong-Ah |
| 2007-01 |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 Lim, Soon-Hee |
| 2007-02 |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 Jeung, Young-Tai |
| 2007-03 |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 2007-04 |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 Kim, Young-Yoon |
| 2007-05 |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 Choi, Soo Young |
| 2007-06 |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 Cho, Jeong-Ah |
| 2008-01 |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Kim Soo-Am |
| 2008-02 |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 Jeung, Young-Tai |
| 2008-03 | PSI and the Korean Position | Seongwhun Cheon |
| 2008-04 |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 2008-05 |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띠뜨레뜨(표지)와 이라이트지(본문용지)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www.kinu.or.kr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 박 형 중 (朴洞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관계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통일연구원, 2007)

「구호와 개발 그리고 지원: 국제 논의 수준과 대북정책을 위한 교훈」 (해남, 2007)

■ 전 성 훈 (全星勳)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2007)

“North Korea and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rmed Forces and Society* (2007)

■ 조 민 (曹 敏)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새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8.3.12)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전망」 (해남, 2007)

■ 허 문 영 (許文寧)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공저(통일연구원, 2007)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공저(통일연구원, 2007)